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일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단기 4342년 (음력 7월 29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475호 1판 2009년 9월 17일 목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많이 벌고 쓴 市·道에 많이 준다?

國稅 배분 이래야 하나

내년 시행 지방소비·소득세 광주·전남 불이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자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된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로는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의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데다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경제 규모와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16일 행정안전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천억원을 지방소비세로 돌려 광역지자체별로 배분한다. 배분 규모는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도 등 권역별로 가중치(100~300%)를 적용, 지역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가운데 교부세 자연감소분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약 1조4천억원이 지원되고, 비수도권에 전체의 77%인 약 1조1천억원이 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5%를 추가해 총 10%를 지방소비세로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현재 소득세의 10%인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을 지방소득세로 변경하기로 하고 세율은 2012년까지 현행대로 소득세율의 10%로 적용하되, 추후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군·구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부동산 교부세 전액을 내년부터 기초지자체에 배분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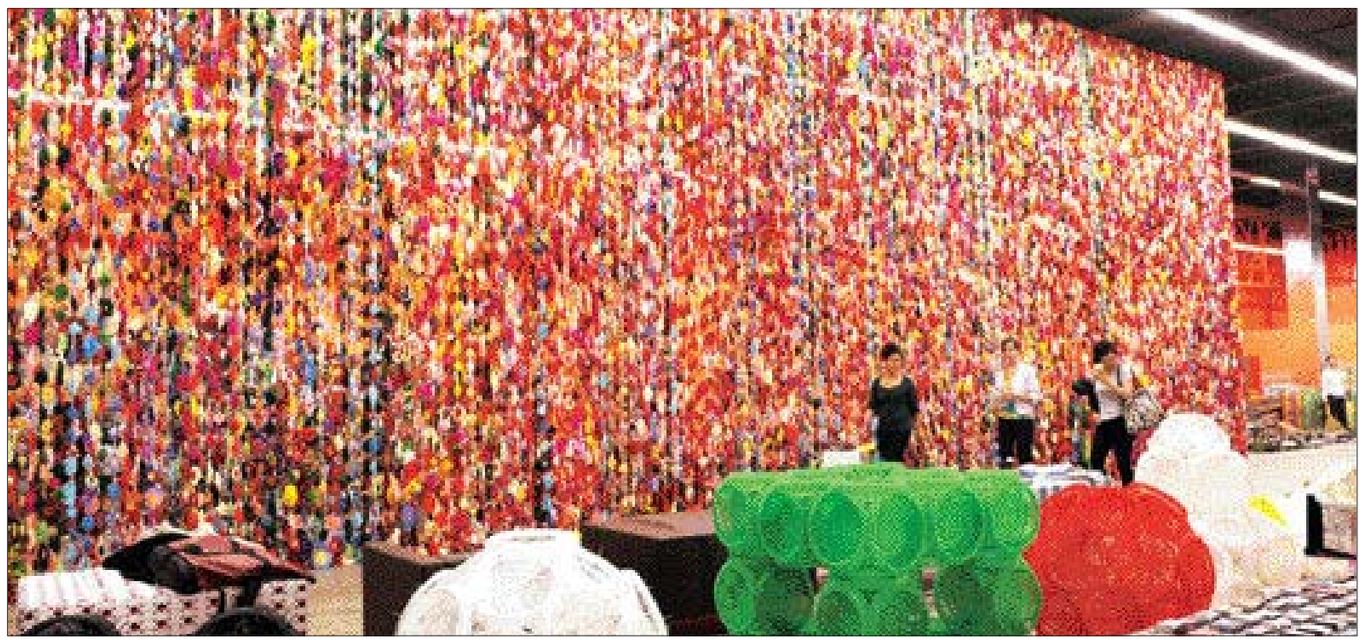
그러나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 지원제도는 우선 정부의 감세 정책에 따른 지방 재정의 공백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지역 간의'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더라도 경제규모와 소비 지수가 타지역에 비해 낮은 광주시와 전남도는 상대적으로 세입 규모가 작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광주는 내년 749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부산과 대구는 각각 1천928억원, 1천311억원의 세입이 전망된다. 또한, 전남도는 내년 1천252억원의 세입 증가가 예측되지만 경북과 경남은 각각 1천978억원, 2천38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재정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따라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자립도 등 지역 사정에 맞게 가중치를 5단계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은 물론 차등세율 적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내일 개막

세계 디자인 예술의 향연 제3회광주디자인비엔날레(18일~11월4일)가 17일 프레·프레스오픈을 시작으로 48일간의 전시에 들어간다. 광주비엔날레 재단은 이날 오전 10시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전시관에서 미술계 인사와 디자인관련 전문가 200여 명을 초청해 프레오픈 행사를 갖는다.

또 개막 당일인 18일에는 개그맨 김용만과 KBS 2TV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영국인 에나벨의 사회로 관람객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펼쳐진다. 사진은 16일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전시관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개막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3·13·16면〉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전당 공사 원안대로"

17개 시민·사회단체 촉구

광주·전남 지역 17개 시민·사회 단체들이 옛 도청 별관의 철거를 전제로 한 설계 원안대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건립 공사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광주전남 문화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등은 16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YMCA무진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공사는 예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어떤 형태로든 왜곡,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하루 빨리 도청 별관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히고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확고한 비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정부가 도청 별관 갈등을 빌미로 참여정부에서 확정한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기본 방향과 예산을 축소하려는 의도를 경계한다"며 "도청 별관 문제로 조성사업이 늦어질 뿐 아니라 다른 현안들이 밀려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가 시민의 합의를 통해 마련된 광주의 미래이자 최선의 선택인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옛 도청 별관 문제해결을 위한 10인 대책위'가 제시한 '5월의 문'(도청별관 일부를 뚫어 문을 만드는 것), '별관 3분의 1이상 존치' 대안을 포함해 별관 원형보존, 설계원안 존중 등 4개 안을 검토한 뒤 이달안으로 최종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F1 제대로 달린다

지원법 3년만에 국회 통과

전남도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포뮬러원(F1)대회 지원법안이 첫 법안 발의 3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내년부터 7년 동안 매년 열리는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가 명실상부하게 국가 차원의 국제행사로 치러지게 됐으며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유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는 16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F1대회지원법안을 재석 224명 중 207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4명의 의원이 반대했고 13명이 기권했다.

F1지원법은 대회 추진 주체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재단법인인 조직위원회를 설립해 대회 개최 준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조직위가 국가 등에 행정·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 등은 대회 준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정부지원 근거를 확실히 했다.

쟁점이 됐던 정부의 개최권료 지원 문제는 개최권료 지원조항 대신 대회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다.

F1대회지원법은 대회가 개최되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을 뒀으나 개최기간이 연장되면 자동으로 지원법도 연장되도록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알 림

2009 광주 제 44회 전국 기능경기대회기념

마라톤·건강걷기대회 사흘 앞으로!

대회장 곳곳 위생시설, 의료진 상시 대기
신종플루 겁먹지 말고 함께 걷고 달립시다

기능한국의 미래를 이어갈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광주일보사가 기능인력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개최하는 마라톤·건경걷기대회가 사흘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일보사는 최근 주의를 요하는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대회장의 모든 출입구와 트랙 곳곳에 위생 시설을 다수 설치했습니다. 또 본부석 메인부스를 비롯한 4곳의 메디칼부스에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이 충분한 진단과 처치장비를 갖추고 만약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 선수와 가족 여러분께서는 발열등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대기중인 의료진과 상담해주십시오. 청명한 가을하늘아래 기능한국의 미래를 기원하는 축제한마당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9년9월20일(日) 오전 9:00~13:00
- 장소 : 광주월드컵 경기장
- 종목 : 마라톤 하프코스(21.0975㎞), 건강걷기코스(4.5㎞)
- 주최 : 노동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 주관 : 광주일보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 협찬 : 정관장

光州日報社